

# 한동훈 “일자리·정년 문제 등 한국노총과 점점 찾아 대화”

##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

한국노총 “정부·여당 국정전환 시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등 제안”

韓 “근로자·국민 위해 복지국가 돼야 우상향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환노위의원, 우재준 환노위의원, 한지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 전 김동명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중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

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

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서 대화해 이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점점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韓-中, ‘트럼프 2기’ 앞두고 소통 강화… 가치외교는 유지

트럼프 취임 후 美-中 갈등 심화 가능성 대통령실 “한중·한미 관계 무조건 갈등·충돌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냐”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 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

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심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사면초가’ 李,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사적유용 기소까지

국민의힘 “野 방탄 굴레 벗어나야” 민주당 “檢 칼날, 野 대표에게만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범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

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

해 10월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